與 '세수부족 대비' 野 '전면철회'… 162조 미래대응기금 격돌

예결위, 오늘부터 부별심사

민주 "미래투자·경기침체 대비 미래기금, 민생 위한 재정 저수지" 국힘 "여유자금, 국회통제 어려워 기금 조성으로 지방재정 악화"



국무위원 등 의원들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가 오는 9일부터 내년도 예산안 부별심사에 나선다. 최대 쟁점인 미래대응기금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은 미래 투자와 세수 부족에 대비할 재원이라고 강조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의 예산 통제권 약화와 지방재정 위축을 우려하며 기금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예결위는 지난 4~5일 종합정책질의에 이어 오는 9~10일 경제부처, 11~12일 비경제부처를 대상으로 부별심사를 진행한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총지출 기준 820조9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93조원(약 12.8%) 증가했다.

정부가 신설을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은 162조3000억원 규모다.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추가 세수를 활용해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분야 사업에 45조4000억원을 투입하고, 12조5000억원은 신규 국채 발행 축소에 활용한다. 나머지 104조4000억원은 여유자금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기금을 통해 성장 기반을 확충하고 경기 변동에 대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반도체 호황이 영원하지 않기에 다음 성장동력을 키우고 세수 부족에도 대비하자는 것"이라며 "여유자금을 모두 빚 갚는 데 써버리면 미래 투자와 경기 침체에 어떻게 대응하겠는가"라고 말했다. 이어 미래대응기금을 "민생을 지켜주는 '재정 저수지'"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이 내년도 예산안에서 30조원 규모의 삭감을 예고한 데 대해서는 "심사에 앞서 삭감 규모부터 정하는 것은 책임 있는 예산 심사가 아니다"라며 "반대에는 근거를, 삭감에는 대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추가 세수를 국가채무 감축에 우선 활용해야 한다며 미래대응기금의 전면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100조원이 넘는 여유자금에 대한 국회 통제도 충분히 이뤄지기 어려울뿐더러, 기금 조성으로 인해 지방재정이 약화된다는 주장이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전 유튜브 〈펜앤마이크TV〉에 출연해 "미래대응기금, 반드시 끝장토론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유튜브도, 어디도 좋다"며 "대통령이 자신 없으면 정책실장이든 장관이든 데리고 나와서 싸워도 된다. 전 혼자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기금이 실제 청년과 미래세대를 위한 재원인지 설명해야 한다며 "제가 납득할 수 있으면, 국민께서 납득하시면 이 예산 적극적으로 밀어드리겠다"며 "그렇지 않다면 전액 삭감하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금이 국회의 예산 통제를 벗어날 수 있다는 주장도 폈다. 그는 "100조원이나 되는 돈이 국회 통제를 받지 않고 대통령의 주머니에서 쌈짓돈처럼 쓰일 수 있다"며 "국회에서는 예산 심사를 뭐하려고 하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야당 간사인 배준영 의원도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미래대응기금과 연계한 정부의 세제개편으로, 현행법에 따라 지급돼야 할 63조원이 내년에 각 시도와 교육청에 덜 내려간다"며 "지방교부세 30조5000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2조5000억원의 재원을 중앙정부가 가져간다"고 지적했다.

한편, 예결위는 부별심사를 마친 뒤 오는 16일부터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를 진행하고, 30일 전체회의에서 심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은 다음 달 2일이다. /박경수 기자

gws0325@metroseoul.co.kr

장동혁 "李 대통령, '탄핵말이'가 답" 장외투쟁 여론전

국민의힘 '조작기소 특검법' 반발

지도부·의원 등 70여명 규탄대회 오늘 청와대서 현장 최고위원회의 내일 현장 의원총회 등 투쟁 예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의원들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복궁 인근에서 열린 이재명 재판취소 악법 강행처리 국민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공소취소 특검법)'에 반발해 장외투쟁에 나서며 대여 공세를 강화했다. 장동혁 대표는 서울 도심 규탄대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탄핵과 재판 재개를 요구했고, 당은 청와대 앞 현장 회의 등 후속 투쟁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민생보다 지지층 결집을 앞세운 행보라고 비판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지난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인근에서 '이재명 재판취소 악법 강행처리 국민규탄대회'를 열었다. 장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 소속 의원 70여명과 원외 당협위원장, 당원 등이 참석했다. 지난 6일 특검법 통과에 반발해 국회 본관 앞에서 규탄대회를 연 데 이어 서울 한복판으로 투쟁 무대를 넓혔다.

장 대표는 "국민을 배신한 대통령, 이제 '탄핵말이'가 답"이라며 "국민을 배신한 이재명, 당장 탄핵해서 끌어내려야 하지 않겠는가. 당장 재판 재개해서 감옥 보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8일에도 논평을 통해 여론전을 이어갔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 현장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조작기소 특검법의 문제점과 민주당의 방탄 입법을 지속적으로 알리겠다"며 "특검 수사 결과가 향후 이 대통령 관련 재판의 공소취소 명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9일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10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의원들의 1인 시위도 이어갈 방침이다. 국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로 특검법 처리를 막지 못한 만큼 장외투쟁을 통해 반대 여론을 모으고 정부·여당을 압박하겠다는 행보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장외투쟁을 민생보다 지지층 결집을 앞세운 행보라고 비판했다.

봉건우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특검법에 대해 "과거 정치검찰의 표적 수사와 권한 남용을 바로잡고 법치주의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며 "쟁점이 됐던 공소취소 권한을 삭제하고 본회의에서 통과됐음에도 국민의힘은 왜곡된 사실과 억지 주장을 명분 삼아 기어이 장외집회를 강행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의 탄핵 공세가 지지층 결집과 정국 주도권 확보를 겨냥한 정치적 수사라는 분석이 나왔다. 중도층 결집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있지만, 당의 강성 이미지가 실제 호응을 얻는 데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날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장 대표의 탄핵 발언에 대해 "정국의 주도권을 가져오려고 강성 지지층들을 결집시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현 국회 구성상 실제 탄핵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고 봤다.

신 교수는 정부에 대한 불만을 특검법 논란과 연결해 중도층까지 결집하려는 계산도 깔려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국민의힘의 이미지가 너무 강성으로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과가 있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박경수 기자

정무수석비서관에 최인호 내정… 靑 2기 인선 속도

국정상황실장에 김태근 내정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에 최인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을 내정한 가운데 일부 비서관들에 대한 추가 교체 등 2기 인선이 속도를 내고 있다.

김정우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은 8일 새벽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입학하기보다 졸업하기가 더 어렵다는 청와대를 떠난다"며 "이제 국정상황실장이라는 무거운 직책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기획재정부 관료 출신으로 20대 국회에서 민주당 국회의원을 지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36대 조달청장을 역임했고,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디지털자산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을 맡았다.

국정상황실장은 국가정보원·경찰 등에서 올라오는 정보를 취합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청와대 안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황에 대응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후임으로는 김태근 현 정무수석실 자치발전비서관이 내정됐다. 새 상황실장으로 대통령 측근 그룹인 이른바 성남·경기라인의 합류 가능성도 거론됐지만 보직 이동 인선이 이뤄진 셈이다. 강원 횡성 출신인 김 비서관은 주로 울산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해 온 시민사회 활동가 출신이다.

국정상황실장 외에 농지법 위반 논란이 제기됐던 정정옥 성평등가족비서관도 사표가 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권 초부터 근무해온 조한상 홍보기획비서관과 이민주 국정홍보비서관은 사의 표명에 따라 후임자를 물색하고 있다. /뉴시스

"소방재정 국비 늘리고 지역 간 편차 줄여야"

당정청, 주요 민생현안 논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8일 만나 소방예산 확충과 가상자산 과세 유예 후속 조치 등 주요 민생 현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소방 재정의 국비 지원을 늘리고 지역 간 소방 서비스 편차를 줄이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당정청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제12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었다. 민주당에선 김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한정애 사무총장이 참석했고, 한성숙 국무총리,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자리했다.

김민석 대표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의 취지에 걸맞게 소방 재정에 대한 국비 지원을 늘리고, 지역 간의 소방 서비스 편차를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면서 이날 안건으로 오른 소방재정 확충 문제에 대해 "2020년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이 이뤄진 이래, 지역 간의 소방 서비스 격차가 줄고 국가 재난 대응 능력이 강화됐지만, 소방 조직 예산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지방 정부에 대부분 의존하는 구조"라고 진단했다.

또 최근 4개 소방노조와 간담회를 가졌다면서 "소방관의 안전, 국민의 안심, 또 지방 정부에는 지나치게 큰 재정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하면서도, 소방 재정을 확충하고 국가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에서 오늘 소방 재정 확충 방향에 대한 긴밀한 논의를 거쳐서 조속히 매듭지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김 대표는 고위당정의 두 번째 안건인 재난·재해 예방에 대해선 "국가의 역량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라며 "폭설, 산사태, 결빙, 한파에 대비해서 제설 장비와 시설을 점검하고, 대응 요원들의 교육과 훈련을 반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예진 기자 syj@